

인문학 육성과 공공도서관

도 정 일(경희대 영어학부 교수 · 문학평론가)

최근 정부는 대학에서의 인문학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상당액의 예산을 풀어 기초학문 발전에 투자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학계에서 낸 제안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 하나는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학문 분야의 주요 저술물들을 정부가 국고로 흡수해서 전국 공공도서관에 공급토록 하자는 것이다.

극소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책 내봤자 대부분 기본 부수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 출판시장의 오래된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사회의 지적 생산력을 고갈시키기에 꼭 알맞다. 이것이 시장의 실패라면 그 실패에 개입해서 필요한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실패이다. 학문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 저술들의 국고 흡수와 도서관 공급안은 그 점에서 정부가 마땅히 검토해볼 만한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런 수단들을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전국의 공공도서관이라지만 정부가 책을 사서 모든 공공도서관에 빠짐없이 한 권씩 공급한다 해도 4백부면 끝이다. 공공도서관 자체가 4백개 뿐이기 때문이다. 4백부라면 중당 기본 부수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다. 그러므로 이 공급안이 채택되어 정책적 실효를 거두자면 공급 대상 속에 모든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도서관들까지 포함시켜 대학의 정보비용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각 지역 공공도서관 수를 최소한 지금의 세 배 내지 다섯 배 수준으로 늘려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공공도서관을 누가 짓는가라는 것이다. 지역도서관 증설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할 일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고 지자체들은 대부분 돈 없다는 핑계로 선뜻 나서지 않는다.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지식정보사회의 인프라 중에서도 기본 인프라가 공공도서관이다. 따라서 도서관 증설 사업은 정부가 추진해온 정보화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정보지식의 평등접근권을 보장하자면 도서관 증설에 관한 종합적

인 국가 정책이 있어야 하며 그런 정책 위에서 정부는 지자체들의 이 분야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립도서관이 서울 한 곳에만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 각 시·도에도 수준급의 집중도서관이 필요하다.

도서관 없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하고 지식정보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망상이다. 공공도서관은 정치적으로 필요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불가결하다. 도서관은 '불요불급'의 장식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도서관을 증설 하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아무 반응이 없고, 연차적 증설 계획을 세워보라는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시민들은 이런 침묵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인터넷 시대에 무슨 도서관이냐?"는 생각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부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사업들에 밀려 도서관 문제는 한없이 뒤로뒤로 밀린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시민이 보기에 정부의 이런 태도는 어떤 나라,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의 부재에 더 많이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문학 육성은 인문학 종사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적 사회'와 '기본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불가결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 영역이 된다. 공공도서관 증설의 정책적 중요성도 그런 것이다. 인문학이 국가 사업이냐고 묻는 사람이나 "도서관이 뭐 급해?"라는 사람은 눈이 아주 짧거나 맹목이다. 도서관과 인문학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본이 있는 나라와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가 망설여야 할 이유는 없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 2001.11.19. 시평에 실린 내용을 도정일 교수의 허락을 받아 재수록한 것이다. 도정일 교수는 현재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의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이다.)